

농림수산식품부

장태평 장관, 국회 현안보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육계 계열화업체와 농가간 위탁사육 계약서의 불공정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무효라고 할 정도로 위법·부당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태평 장관은 지난 2월 10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출석, 주요 현안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계열 농가들은 계약서 내용보다는 농가 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종량별 가격기준, 연료비 공급표, 출하감량 기준 등의 적정성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그러나 앞으로 업체와 농가간 의사소통 활성화 및 계약서 문제조항 개정 등을 통해 상호 신뢰 구축 및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장관은 아울러 축산법 개정을 통해 계열화사업의 개념, 계열화업체의 권리와 의무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가축방역 정책 설명회’ 개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월 16일 하영제 제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관련 단체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09년 가축방역 정책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하영제 제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가축방역은 제2의 국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가축방역 업무의 최일선에서 땀흘리고 있는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며, 주변 국가의 구제역·AI 발생과 관련 우리나라가 청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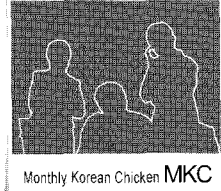
이 자리를 통해 농식품부는 ‘2009년 가축방역 정책’, ‘공익수의사 운영계획’, ‘동물복지보호대책 추진계획’,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계획’, ‘AI 상시방역 추진계획’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3월부터 시작되는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에 따른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가축방역 설명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 가축방역사업 계획 수립시 반영하는 등 가축방역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에서 저병원성 AI 항체양성(H5형) 확인

농림수산식품부는 AI 상시방역체계 일환으로 H5/H7형 저병원성 AI에 대한 예찰검사 중에 전남 순천·곡성·보성지역 토종닭 농장에서 H5형 AI 항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H5형 AI 항체양성 확인농장들은 각각 토종닭



100수(순천), 1,700수(곡성), 18,300수(보성)를 기르는 곳으로 지난 2월 13일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1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 2월 16일 H5형 항체 양성반응을 보여 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2월 17일 늦게 H5 항체 양성을 확인했다.

이번에 확인된 것은 감염력이 있는 AI 바이러스가 아니고, 닭의 체내에서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 생성된 면역 항체이다.

저병원성 AI의 경우 농가가 자율적으로 방역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병원성으로 변이될 수 있는 H5형 및 H7형 AI의 경우 항체만 검출되더라도 고병원성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AI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해당 농장에 닭을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매몰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AI 재발위험이 높은 22개 집중관리지역의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매주 임상예찰과 철새 분변검사, 오리 및 닭에 대한 예찰 검사 등 AI 상시방역체계를 확고히 구축해 운영함으로써 국내에 AI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규제개혁과제 52건 확정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월 19일 농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정 여건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52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년도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분야별로는 ▲농지이용 효율화 및 농촌지역개발 제도개선(6건), ▲협동조합 제도 개선(5

건), ▲농축산물 가공·유통 활성화(10건), ▲농자재산업 진입규제 완화(11건), ▲농식품 표시 인증제도 개선(5건), ▲어업제도 합리화(15건) 등이다.

이날 발표한 규제개혁 내용에 따르면 사료제조업 등록시 제조·공정 또는 포장 방법상 일부 시설이 불필요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지자체장(시·도지사)에 위임하고(사료관리법시행규칙 개정), 축산물가공업의 허가권한과 축산물가공품목 제조 보고 받을 권한을 광역시장·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 시장에게 이양한다(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는 방침이다.

또한 불가피하게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인해 살처분을 한 가축살처분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보상금지급 기준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그 밖에도 농지내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축사의 건폐율(현행 20%)을 상업·공업지역과 같이 상향 조정(90%~70%)하고, 시·군의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건폐율의 하한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농지내 축사신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참조.

'농식품안전관리 개선방안' 발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월 2일 먹거리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자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농식품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안전성 검사체계 개선과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이번 개선방안에는 위해식



품을 생산하거나 유통시키면 이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가 공개되며 학교와 군부대 등 집단급식소의 검사를 지난해에 비해 5배 이상 확대하는 등 안전성 검사도 강화된다.

주요 발표 내용으로는 식품의 안전성 검사는 품목별·단계별로 농림수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분담하고 위해기준은 식약청장 고시로 했다.

축산물물은 소비단계를 제외한 모든 단계를 수의과학검역원과 지방자치단체(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수행하게 된다.

검사대상 품목의 경우 축산물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소관 전품목(축산물 117성분)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축산물 잔류물질, 미생물, 수거검사도 지난해보다 강화됐으며 수입신고에 따라 약 20%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안전성 검사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용어 정비와 위험평가, 잔류물질조사, 지자체와 민간검사기관 활용 등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축산물 위해식품 회수정보를 제외한 일반적인 식품안전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으나 잔류물질 검사결과 기준 위반 농가의 농장명, 주소지 등 세부내역을 수시로 인터넷을 통해 공개기로 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AI·PI 신속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합동교육 실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최근 해외에서 사람 및 가금

류의 시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일선 지방자치단체 등 가축방역 및 보건 담당자를 대상으로 AI(조류인플루엔자)·PI(신종인플루엔자) 합동교육을 실시해 분야간 협조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번 합동교육은 16개 시·도 및 시·군·구 가축방역 및 보건 담당자 등 1,200여명을 대상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난 2월 10일부터 2월 27일까지 실시됐으며, ▲AI에 대한 이해 ▲AI 인체감염 개요 ▲AI 방역대책 및 발생시 행동요령 ▲AI 인체감염 예방조치 개요 등에 대한 교육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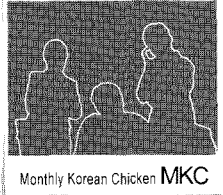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합동교육을 계기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사람의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불안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축산물 등 수출지원 종합 T/F단 구성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침체된 축산업 및 동물약품 시장을 조기에 부흥시키기 위해 '수출지원 종합 T/F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 T/F단은 삼계탕 수출팀 등 3개 분야에 원내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삼계탕·돼지고기 등 수출 핵심품목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지원 종합 T/F단'은 미국·일본 등 주요 수입국에서 요구할 수 있는 축산물의 검사 기준절차를 조기에 마련하고 수출위생조건 협의 및 작업장 점검시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며 현장중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업체 등 민간 검사관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HACCP 위생 교육 및 도축병리 심포지움 등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게 된다.



수출지원 종합 T/F단장인 이주호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장은 “한 해 동안 검역원의 역량을 집중하여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한편, 축산농가 및 수출업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출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앞으로 이 단장은 수출 지원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기적인 수출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및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적극적인 수출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수출지원 종합 T/F단’ 삼계탕 수출팀 주요 임무〉

- 수출국 요구 충족(축산물위생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 대미 등 삼계탕 수출 관련 수입국 등 대외협력
- 대미 등 삼계탕 수출 관련 검역검사 관련 사항
- 수출작업장 담당자 및 검역관 등 검사역량 강화 지원
 - 도축검사관 실습교육, 국제세미나 개최
 - HACCP 적용 가공장 미생물 담당자 교육

농촌진흥청

중장기 가금산업 발전대책 수립 협의회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지난 2월 11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FTA에 대응하기 위한 가금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대한양계협회, 한국계육협회, 한국오리협회, 농협중앙회 등과 함께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 등



가금분야를 담당하는 각 기관과 단체에서 실무담당자들이 참여해 열띤 토의를 가졌으며 이번에 토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구성될 가금산업발전대책위원회(T/F)에서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중장기 가금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국계육협회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육계농가의 연 1억원 소득을 위해서 규모화와 이를 위한 축사 시설자금 지원이 필요하며, 닭고기 가격결정 구조를 생계가격 고시에서 도계육 고시제로 변경·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대한양계협회는 계란의 유통구조개선, 지역별 계란집하장 설치 지원, 종계·부화업의 허가제 도입, 계분 자원화사업 지원 등을 제안했다.

농협중앙회는 닭·오리고기 브랜드육 유통 활성화, 삼계탕 수출 지원 확대, 계란 유통시스템 개선 및 가공사업 활성화 등을 요청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닭·오리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계사의 환기시스템, 지열 에너지 이용 냉난방시스템 보급 지원과 폐사기축 처리 시설 지원 및 친환경축산농장 인증기준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김영만 사무관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몇 번 더 의견수렴 과정을 거



기·관·단·체·소·식

친 후 내실 있는 종장기 가금산업 발전대책을 수립 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축산과학원 서옥석 가금과장은 “제때에 농식품부나 협회 등에서 필요로 하는 답을 내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자주 가질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우리맛닭’ 종계 연구개발 성과 기술이전

농촌진흥청은 지난 2월 26일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대강당에서 100% 순수형질 고정 에 성공한 재래닭 순계와 국내 토착 육용계를 기초로 육성 출시한 ‘우리맛닭’의 부·모 종계를 전국 6개 도, 8개 전문 종계장과 기술 이전식을 가졌다.

더불어 개발종계의 산업적 이용가치 제고를 위해 ▲‘우리맛닭’ 종계의 개발의미와 비전(국립축산과학원 서옥석 가금과장), ▲생산자 입장에서의 산업적 가치(엘림농장 김홍명 대표), ▲소비자 입장에서의 식재료 가치(한식명인 옥치민 리츠호텔 조리부장)에 대한 토론회와 ‘우리맛닭’ 시식회가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각 도 농업기술원과 관할지역 농업기술센터의 추천을 받고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개발성과 사용 심의위원회에서 종계장 시설규모, 실용계 공급능력, 종계장 운영경력 등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거쳐 그 자질과 사육기반의 적격성을 인정받은 종계장을 선발하여 금년 1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2만1천수 내외의 ‘우리맛닭’ 종계를 분양기로 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서옥석 가금과장은 “앞으로 2012년까지 ‘우리맛닭’의 산업계 공급물량을 600만수까지 늘릴 목표로 기술이전 업체의 조

기 확대, 대형 종계장이 참여한 계열화 사업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영남·호남지원 개원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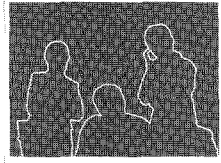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곽형근)은 가축사육농장과 식육판매장의 HACCP 참여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민원 편의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2009년 1월부터 영남지원(대구)과 호남지원(광주)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영남지원(지원장 김병훈)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지역을, 호남지원(지원장 이주연)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제주도의 축산물작업장 HACCP지정과 정기심사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른 지원설립 개원식을 호남은 지난 2월 19일, 영남은 지난 2월 20일 관할지역 축산 관련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각 지원 사무실에서 개최했다.

기타 자세한 본지원간 업무 범위 및 직원 현황은 기준원 홈페이지(www.ihaccp.or.kr)를 참조.



축산물등급판정소

2009년 현장연구조사 시작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는 축산물 등급판정 업무 및 식육관련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올해에도 현장 활용도가 높은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2009년 현장연구조사'를 시작했다고 지난 2월 20일 밝혔다.

2003년부터 축산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된 현장연구조사는 해를 거듭 할수록 내용의 충실도 및 완성도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근래에는 독자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외부 연구기관과 연계하는 등 그 활동 범위를 점차적으로 넓혀가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현장연구조사' 과제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의 접수기간동안 10개 지역 본부에서 모두 18개 과제를 신청 받아 지난 1월에 평가단 및 내부 심사위원의 2회에 걸친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소 2, 돼지 5, 닭 2, 계란 1 등 모두 10개 과제를 선정했다.

본 연구과제는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10월까지 약 10개월간 진행되며 7월 중간발표 및 11월 최종발표회 등 향후 2차에 걸친 연구발표를 통해 대상 1, 최우수 1, 우수 1팀을 선발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2009년도 현장연구조사 과제 중 자금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VQIS를 이용한 닭도체 기계등급판정 가능성 고찰 ▲닭고기 신선육과 해동육의 기계적 판별법 연구 ▲계란의 선별 및 유통단계별 위생·안전성 제고에 대한 비교연구 등 3개 과제이다.

농협중앙회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1조원 긴급 지원

농협중앙회는 최근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사료가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조5천억원에 이어 올해도 1조원의 자체자금을 마련해 2009년 2월 12일부터 긴급 추가 대출키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축산농가는 연 1%의 저리로 최대 2억원까지 사료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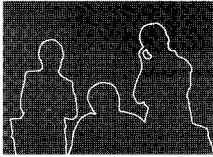
이에 따라 농협은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의 사료구입을 위해 총 2조5천억원의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12억원(기존 137억원, 신규 75억원)의 이자를 금년에만 자체적으로 부담할 계획이다.

금년 자금지원에서 달라진 점은 대출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대출약정 후 사료구매실적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 제출 시마다 분할 지급한다. 또한 예적금은 담보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농협은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월 9일부터 사료가격을 평균 5% 전격 인하한 바 있다.

〈2009년 1조원 추가지원 사업(요약)〉

- 지원 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대출취급기관 : 전국 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협
- 대출조건
 - 대출금리 : 연 1%
 - 대출기간 : 소는 1년 거치 2년 원금균등할부 상환, 돼지·닭 등은 2년 원금균등할부상환



Monthly Korean Chicken MKC

기관·단체소식

- 대출금 지급 : 대출약정 후 사료구매실적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 제출 시마다 분할하여 지급
- 농가당 지원한도
 - 소 1억원, 양돈 2억원, 양계·오리 5천만원, 기타 3천만원
 - 단, 작년에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축종별 지원한도에서 기 지원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에서 추가 지원
 - ※ 금년부터는 담보대출 시 예적금 담보대출은 불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사료 의제매입세액 공제 폐지 반대 성명

기획재정부가 사료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에 축산관련단체들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2월 24일 성명을 내고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폐지로 인한 사료업체의 손실은 축산농가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국가의 줄어든 세수를 축산농가의 주머니에서 충당하겠다는 의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과의 FTA 타결, DDA 농업협상으로 농축산업 회생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 온 세제지원마저 폐지한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축산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극치인 공제제도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가금학회

신임 회장에 박장희 사료협회 사료연구소장 선임



한국가금학회는 지난 2월 20일 (사)한국사료협회 4층 회의실에서 제1차 임원회의 및 이사회를 열고, 향후 2년간 학회를 이끌어 갈 임원진을 선출했다.

회장에는 사료협회 박장희 사료연구소장이, 수석 부회장은 김재홍 서울대 교수가 맡게 됐다.

이날 임원회의 및 이사회에서는 지난 정기총회에서 위임받은 76명의 이사와 22명의 임원진을 확정하고 춘계 심포지엄 일정 등 올 사업계획을 의결·승인했다. 춘계심포지엄은 5월 하순에서 6월 초순에 개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마사회

농축산 관련기업 위한 특별펀드 조성

한국마사회(회장 김광원)와 금융권은 경제위기로 최악의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축산업 관련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특별펀드를 조




성, 운영키로 했다.

마사회는 지난 2월 4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윤용로 기업은행장,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축산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한국마사회의 농축산 중소기업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사회는 농축산 중소기업 지원을 위

해 500억원을 은행에 1년간 무이자로 예탁하고 은행도 추가로 500억원을 지원, 1,000억원 규모의 특별펀드를 조성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축산 중소기업에 융자해 줄 계획이다.

이 펀드는 농수축산·식품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우선권이 주어지며 보증 및 대출절차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내부 규정을 따르며 지원 대상 기업은 보증요율, 대출금리 등에서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펀드로 지금까지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을 받지 못했던 기업들도 저리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됐다"며 "대출가능여부와 금리는 기업별로 다르겠지만 이번 펀드로 전체적으로 지원대상기업의 금리를 낮춰주고 대출조건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소식>

■ 농림수산식품부

- 2009년 2월 9일자
<고위공무원 전보파견>
- 농촌정책국장
- <과장급 전보>
- 축산정책팀장
- 식품산업정책팀장
- 농림수산식품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안호근

기술서기관 노수현
서기관 권재한
부이사관 석희진

- 2009년 2월 20일자

<국장급 전보>

- 식량정책단장
- 축산정책단장
- 2009년 2월 23일자
- 축산경영팀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최희종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창범

기술서기관 허태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2009년 2월 13일자
- 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 허윤진